

# 서울대 정시 이탈자 80% '자연계'… '의대 이동' 고착화

서울대 정시합격자 224명 등록포기 자연계 180명… 5년 새 최다 규모 인문계열, 전년比 29.4% 줄어  
공대·첨단계열서 이탈 두드러져 일부 학과 실질 합격선 하락 예상

서울대 자연계 합격자 이탈이 정시모집에서 다시 한 번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자연계 합격자 가운데 180명이 등록을 포기하며, 상당수가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서울대 자연계 이탈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2026학년도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 인원은 총 224명으로, 이 가운데 자연계가 180명(80.4%)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규모다. 인문계는 36명(16.1%), 예체능은 8명(3.6%)이다. 등록포기 비중의 대부분이 자연계에 집중된 것이다.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추가합격 상황>

대학명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증감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문	392	73	20.2%	452	65	14.4%	434	35	8.1%	466	51	10.9%	457	36	7.9%	-9	-15	-29.4%
자연	579	127	21.9%	721	88	12.2%	769	164	21.3%	754	178	23.6%	781	180	23.0%	27	2	1.1%
예체능	96	2	2.1%	172	2	1.2%	170	3	1.8%	169	6	3.6%	170	8	4.7%	1	2	33.3%
계	1037	202	19.5%	1345	155	11.5%	1373	202	14.7%	1389	235	16.9%	1480	224	15.9%	19	-11	-4.7%

생의 진학 선택이 입시 결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별 학과의 합격선 변동 폭은 공식 접수 공개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흐름은 서울대에 국한되지 않았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자연계 등록포기 인원이 연세대(432명)와 고려대(435명) 역시 대규모로 발생했다.

종로학원은 특히 2027학년도 지역의 사제 도입을 변수로 꼽았다.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될 경우, 서울대 자연계와 의대 동시 합격자 가운데 의대를 선택하는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의대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서울대 자연계와 의대에 동시 합격할 경우 최종 선택은 여전히 의대에 쏠리고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2027학년도 이후에는 서울대 자연계 등록포기 현상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대 자연계 정시 등록포기 인원은 2022학년도 127명, 2023학년도 88명, 2024학년도 164명, 2025학년도 178명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확대 이전인 2023학년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확대됐던 2025학년도(178명)보다도 등록포기 인원이 늘면서, 자연계 이탈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학과별로 보면 공대와 첨단계열에서 등록포기가 두드러졌다. 첨단융합학부는 16명(모집정원 대비 21.9%)으로 전년 보다 33.3% 늘었고, 전기정보공학부는

15명(28.3%)으로 25.0% 증가했다. ▲간호대학(14명) ▲산림과학부(11명) ▲약학계열(10명) ▲컴퓨터공학부(9명) ▲화학생물공학부(8명) 등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이 발생했다. 자연계 40개 학과 중 37개 학과에서 등록포기가 발생한 반면, 의예과와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 등 3개 학과에서는 등록포기가 없었다.

인문계열은 등록포기 인원이 36명으로 전년(51명)보다 29.4% 감소했다. 학과별로는 경영대학과 경제학부에서 각각 7명이 등록을 포기했지만, ▲심리학과 2명(모집정원 대비 22.2%) ▲정치외

교학부 2명(7.7%) ▲지리학과 2명(25.0%) ▲역사학부 1명(10.0%) ▲영어교육과 1명(12.5%) 등이 등록을 포기하며 인문계 전체를 보면 자연계만큼 구조적 이탈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인문계 등록포기 역시 의대와 치대, 한의대와의 중복 합격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연계 대규모 등록포기로 서울대 일부 자연계와 공대 학과는 실질 합격선 하락이 예측된다. 상위권 합격자가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추가합격자가 채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최상위권 수험

##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현장 수리검정 시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행 거리상 근접성 바탕 검정 신속처리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19일부터 수리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현장 검정 방식’의 수리검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계량기 수리검정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전기차 충전기 검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난해 말까지 확보해 이번에 현장 중심의 검정 체계를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경우 계량값의 정확도를 검정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검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 검정기관은 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 용산구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경우 계량값의 정확도를 검정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검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 검정기관은 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이현진 기자

## 교원 역량개발 시스템 ‘G-LINK’ 도입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AI 기반 교원 연수체계 혁신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교원 역량 개발 시스템인 ‘G-LINK(GIGE Level Indicator for Navigating Key Competences)’를 개발·적용하며 교원 연수 체계의 혁신에 나선다.

‘G-LINK’는 연수생의 역량 수준을

각각으로 진단하고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반 분석 도구다. 온라인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량·정성 자료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개인 및 집단별 성취도는 물론 보완이 필요한 영역까지 정밀하게 도출한다.

국제교육원은 평가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G-LINK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항 개발과 검증을 통해 시스템

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G-LINK’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으로까지 연결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수생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안하고, 마이크로러닝(Short-form learning) 콘텐츠를 제공해 연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G-LINK’는 올해 2월 중등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를 시작으로 국제교육,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연수 프로그램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 경기도,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확대, 저소득 선정기준 완화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원(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올해 광주·김포가 추가돼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을 포함한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 가구 월 279만원)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되며, 올해부터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으로 유지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오늘의 날씨



## 메트로 한줄뉴스



▲ 다카이치 日 총리, 중의원 본회의서 제105대 총리 지명 받아

/사진 뉴시스

▲ 인도네시아, 니켈 통제 강화…미·중 핵심광물 경쟁 속 EV 공급망에 파장

▲ 中 “남중국해 전비 경계순찰”…미·호·比 연합 순항훈련 맞서

▲ “北 김정은 딸 주애,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인물 될 수도”

▲ “트럼프, 국립공원들의 역사와 과학 말살” 보존기관들 소송전

▲ 美 캘리포니아, 테슬라 판매정지 보류…‘자율 주행’ 허위광고 시정 판단